



계절은 봄 날씨는 한여름 때 이른 불볕더위가 이어진 30일 해남군 송호리 해수욕장에서 수련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단기·중장기 '그랜드 플랜' 만들자



문재인 시대
광주·전남 현안 점검

<9> 지역발전 대전환기

광주·전남이 9년만의 정권교체를 맞아 문재인 정부 5년을 지역발전의 대전환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탕평과 균형'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외지역 지원과 배려 확대가 예상되는 호기를 맞아 지역 그랜드플랜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 차별화만 하지 말고 미래 비전 철저히 준비해야 광주 군공항 이전·한전공대 등 갈등 사안 상생 배려로 해결을

광주·전남은 역대 영남 정권에서의 심각한 차별은 물론 호남주도 정권에서의 역할 차별도 인한 예산, 정책, 국책사업 등에서의 불이익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 마련과 추진이 시급한 과제다. 특히 5·9 대선 과정에서 호남 유권자들

의 뜨거운 지지를 광주·전남에 대한 중앙 부처의 시선이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함께 인적 네트워크를 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이미 도출된 지역 현안은 물론 중장기적인 그랜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호남을 챙기려 해도 지역에서 명분이 타당하고 파급력이 큰 사업을 만들어오지 못해 어쩔 수 없었다'는 절절을 이번만큼은 밝히 말아야 한다는 경종도 울리고 있다. 따라서 지역 현안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우선 과제 채택을 필두로 2018년 정부 부처 예산 및 사업 반영, 문재인 정부 장기

국가 정책에 포함하는 노력 등 전략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이와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한전공대 대학 설립 등 지역 간 갈등과 이해 상충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파트너십을 발휘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군공항의 경우 이전 후보지를 놓고 이미 '남비현상'이 엿보이고, 파급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공대는 유지경쟁 조짐이 나타나 갈등이 내재한 상태다. ▶2면으로 계속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행자 김부겸·문화 도종환 국토 김현미·해수 김영춘

문대통령 장관 후보자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로 김부겸(59)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도종환(63)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김현미(55) 의원과 김영춘(55) 의원을 각각 발탁했다.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관련기사 3·4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김 행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때론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사회 개혁과 지역주의 타파, 그리고 국민통합에 헌신했다"면서 "새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분권, 균형발전, 국민통합의 목표를 실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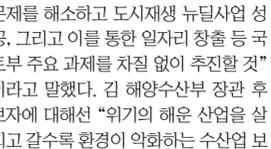
또 박 대변인은 도 후보자에 대해 "문화적 통찰력과 국회에서 의정 경험이 다른 부처보다 시급한 속제가 많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라며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문화·예술·체육 공동체와 광복 한국의 새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평했다. 박 대변인은 김 국토부 장관 후보자 발탁 배경과 관련,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으로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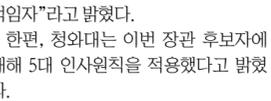
김부겸 행자



도종환 문화



김현미 국토



김영춘 해수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 그리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토부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위기의 해운 산업을 살리고 갈수록 환경이 악화하는 수산업 보호, 또 이제 다시 시작하는 세월호 진상 규명 등 해수부 주요 과제 해결의 최고 적임자"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에 대해 5대 인사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 오늘 표결

본회의 통과할 듯

국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여야 간사단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심사결과보고서를 31일 오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현재 민주당(120석)은 물론이고 국민의당(40석) 의원 대부분도 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5명의 무소속 의원과 표결에 참여하되 반대하겠다는 당론을 정한 바른정당 의원 일부도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큰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날 간사단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 국민의당 김광수 간사, 바른정당 김용태 간사가 참석했지만 자유한국당 경대수 간사는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적극·부적극 의견이 상존한다. 이를 종합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문특위는 3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했던 이경호 정무특보와 전승현 전남개발공사 사장 등 증인 2명에 대한 검찰 고발도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안건을 부의하는 절차를 거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대통령도 몰랐다

문대통령 "충격적" ... 조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데 대해 반입 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 실장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으며,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

- ① 어떤 경위로 추가 반입됐나
- ② 반입은 누가 결정했나
- ③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나
- ④ 새정부에 보고 누락 이유는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발사대 4기

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다음날인 지난 26일 청와대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국

방정책실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지난 26일 국방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면서 "그때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